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 독일의 시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과 국내 도입 방안 / 장인성 통신원 (독일)

지방재정 일본 '고향납세'제도의 이점과 폐단 / 국중호 통신원 (일본)

지역발전 일본의 주민자발적 여촌활성화 사례
(도쿠시마현 미나미초 이자리) / 김지윤 통신원 (일본)

일본 '고향납세'제도의 이점과 폐단

개요

-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어 온 '고향사랑 기부금 제도'의 전례(前例)는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'고향납세' 제도임
-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그 특징적인 운영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을 고찰해 보기로 함

'고향납세' 제도의 실시 경위와 내용 요체

- '고향납세' 제도라 함은 응원과고픈 지방자치단체 (도도부현, 시정촌, 특별자치구)에 기부한 금액에서 2천엔(약 2만원)을 뺀 만큼을 자신이 납부할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
- 고향납세 제도는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에서 '지방 중시'를 부각시키려 검토한 데서 비롯되었음
- 그 후 2008년 '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'(4 월 30 일 법률 제 21 호로 공포)에서 '기부금 세액 공제'를 지방세법(제 37 조의 2)에 추가한 것이 고향납세 제도의 시행 근거가 되고 있음
- 고향납세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출신 고향만이 아니라 타향에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'고향'납세가 아닌 '지역기부' 제도라 할 수 있음
-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나라로서 '고향으로의 기부'라는 어감으로부터도 듣는 느낌도 좋고 '똥'가 공헌할 수 있겠다'는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이점과 폐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

'고향납세' 제도의 이점

- 고향납세는 2011년 동일본 대재해(후쿠시마(福島)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이때 발생) 및 2016년 구마모토(熊本)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힘을 발휘했는데, 이는 재정사정이 어렵게 된 이들 지역에 고향납세를 이용한 많은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임
- 고마운 손길이었다는 근거를 이하와 같이 실제의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음

-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재해가 발생한 2011년 고향납세 기부금액은 649억엔 규모로 그 전년인 2010년의 67억엔에 비해 9.7배나 늘어났음
- 구마모토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6년은 2,566억엔으로 2015년의 1,471억엔에 비해 1.7배나 늘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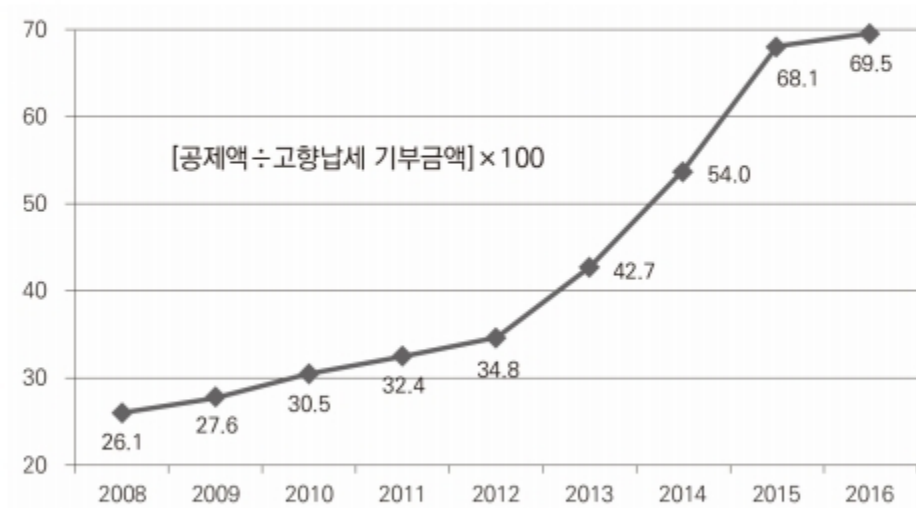
'고향납세' 제도의 폐단: 염불보다는 잣밥

- 고향납세 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지역으로의 기부 역할과 같은 좋은 면만 있거나 하면 그렇지 않음
- 많은 사람들이 '매력적인 답례품'을 받으면서 '절세 수단'으로 이용하고자 한 동기에서 고향납세를 선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
-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 지역으로 기부를 유도하려, '우리 지역을 선택하시면 이런 답례품을 드린다'는 식의 과열경쟁이 불거졌음
- 납세자(기부자)로서도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고급 소고기, 해산물, 여행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었으니, 염불보다는 잣밥에 눈독이 가 고향납세의 의도가 변질되는 폐단이 나타났음

'고향납세' 제도의 폐단: 절세수단

-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향납세 제도에서는 2,000엔 이상의 기부액에 대해 납세하게 될 소득세나 주민세로부터 공제하고 있음
- 이를 보기 위해 고향납세 기부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<그림 1>과 같음
- <그림 1>에서 보듯이 세액공제액이 고향납세 기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향납세 제도가 시작되는 2008년 26.1%에서 2016년 69.5%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
- 즉 2016년도(현 시점에서 최신자료임)에는 고향납세 기부금액 중 약 70%가 본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주민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만큼 고향납세 제도가 기부금의 성격보다는 절세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음

| 그림 1 | 고향납세 기부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(%)



자료: 総務省(각년도) 「ふるさと納税(密附)に係る密附金額控除の適用状況について」를 참고하여 작성.

‘고향납세’ 제도의 폐단: 지역이기주의

- 고향납세 또는 지역사랑 기부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답례품 경쟁 이외에 다른 함정도 적잖이 도사리고 있음
- 이름이야 어떻든 이들 제도는 제로섬(zero sum) 게임에 가까운데, 이는 어느 한 곳의 기부(납세)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래 납부처의 세금이 줄어들을 뜻하기 때문임
- 세수입이 줄어드는 지역(대개는 대도시)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쌓이기 쉬운 까닭에 자기 지역만을 우선하려는 지역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할 대목임

우리나라에서 ‘고향사랑 기부제도’가 도입될 경우의 과제: 쏠림현상과 관민유착관계

- 우리나라에서 지역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인기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예상된다
- 일본에서도 2018년도 오사카부(大阪府) 이즈미사노시(泉佐野市) 등 4개 지역이 전체의 22%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컸음(일본경제신문 2018년 8월2일자)
- 우리나라에서도 예컨대 안동소주나 이천쌀과 같은 지역특산물이나 빼어난 명승지를 갖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기부액 차이도 커질 것임
- 그리되면 정녕 재원이 필요한데 기부액이 적은 지역으로서는 ‘왜 우리한테는 이리도 야박한가? 우릴 버리는 것이냐? 더 사랑해 주랴’며 매달리는 응석체질이 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

- 정책당국자(원:예, 관료와 의회)와 지역기업과의 유착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일 것임

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 제고 문제

-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지방세 비중 상승과 같은 재정면에서의 자기책임은 그리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
- 자기책임이 제고되지 않은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국고보조금을 끌어와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어 당선에 유리하도록 하려한 정치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임
- 이는 지역주민의 부담의식을 높이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만 강조하다가는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끝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견제와 감시가 요구됨
- 일본에서 고향납세가 뉴스거리로 종종 등장하지만 이용자는 2016년 전국민(1억 2천 7백만명)의 1.8% 수준이나 이는 2008년의 0.03%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임(총무성 통계국 「人口推計」와 <그림 1>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)
- 고향납세 기부 금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도는 5,127억엔으로 2017년도에 비해 40%나 늘어나고 있음(일본경제신문 2018년 8월2일자)
-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된다면 '아,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(고향, 타향)을 받쳐주고 있구나' 하는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건전한 지역활성화에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임



국중호 통신원
(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)
kook@yokohama-cu.ac.jp